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2006. 19권 3호 pp.67~7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ESD)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  
-〈지속가능성〉의 개념 공유를 위한 환경교육과 그 범위-

김태경  
(경인여대)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E(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Its Economy)

-EE and Its Boundary for Co-conceptual Approach to  
Sustainability-

Tae-Kyung Kim  
(*KyungIn Women's College*)

**Abstrac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is inclined to become popular topics in EE related debates, almost similar to populism, with declaration of UNESCO's Decade OF ESD (DESD). However we can't avoid that development in ESD practically means economic linear progress. Basically UN's declaration is to accomplish worldly task on human civilization, social &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ESSD. ESD is also important means for practicing ESSD, which has proved to be failure since Brurant Report, owing to uncertain recognition of sustainability which should be something figured out by their surrounding circumstance or the conditions following its community culture, all same around the world.

In this circumstance, we need certain identification on ESD globally recognized, no matter with the developing level of economy. But sustainability is usually managed or controlled by economically powered countries, by improving relatively under-development countries's economic conditions for equity. They believe under-development countries's env. problems can't be resolved without securing of economic equity.

Under-development countries's economic equity can be come true ? even by another economic super powers. It really means just controlling or management by them. These all controlling process can't secure under-development countries's sustainability. Because it is not something just controlled, characterized as growing up by self-supporting system of ethnic or regional communities. So identification of sustainability in here is <What should it be>, not <What is it>. Following its identification, we should discuss ESD, and furthermore for real ESD, there is powerful need to change it into ES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its Economy) to reflect this co-conceptual approach to ESD.

And also we need to distinguish the educational contents boundaries among ESD and EE for this. Basically existing EE has been dealing with pollution-oriented or its related social comprehensive subjects, so it seems that EE is not familiar and harmony with ESD contents, however in alternative case I propose in this paper, changing into ESE, it could include almost all of ESD subjects, furthermore practically EE might be same with ESE.

**Key words** : ESD, ESSD, sustainability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ESSD의 반성과 ESD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E ;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선포하면서 ESD는 이제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되었고, 각종 환경 관련 토론회와 학술 대회 등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ESD의 모태가 되었던 ESSD는 그 역사가 20여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특히 1992년 리우회의 이후로 그 실천적 노력을 위하여 많은 시도와 논의가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러왔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성공적인 DESDE를 위해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ESD에 대한 환경교육적 논의는 포퓰리즘에 가까울 정도로 빈번해졌지만, 엄밀하게 말하여 ESD와 환경교육은 내용적으로 영역 구분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DESDE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환경교육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를 국한하려는 한계를 보이는 등, 내실이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ESSD의 실천적 노력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ESD는 이를 위한 중요한 실천의 계기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ESSD가 교육적 노력으로써 ESD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근본 문제점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SD가 ESSD의 성공적인 실천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ESSD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ESD가 유엔에서 주관하는 것이니만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차원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ESSD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천적 기여는 1차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공유>에 있지 ESSD 그 자체에 있지 않다. ESSD는 리우회담 이후의 그 궤적이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ESD가 ESSD의 교육적 실천 방안이며, 동시에 환경교육이 ESD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복잡한 정치 경제적 요인까지 환경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ESD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또는 지속가능

함)에 대한 관점의 문제, 혹은 그 실체에 대한 문제가 ESD에 대한 (환경)교육적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또는 무엇이 지속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류 차원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여전히 선진국이 추구해 왔던 단선적 진보가 후진국과의 발전적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지금의 DESD 또한 그런 도식위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공동의 미래가 선포된 이래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성과 없이 진행된 것도 단선적 진보로서의 발전이 가지는 허구에 대한 비판의 수용이 없이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지속가능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이 ESD의 선결적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며, 환경교육은 바로 여기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ESSD가 가졌던 정치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여과 없이 ESD가 <지속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의 개념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단선적 진보(개발)의 이데오르기에 또 다른 형태로 편승하는 방향으로 전도될 것이며, 그러기에 교육이 먼저 기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공유 과정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실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경제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은 경제와 관련이 불가피하기에 인간의 사회생활은 사실상 경제생활이라는 점이 단적으로 이를 대변한다<sup>1)</sup>. 아울러 그 동안의 ESSD와 지금 선포된 DESD의 핵심 관점인 선·후진국의 발전과 형평의 문제도 역시 경제의 문제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르는 대안적 환경론으로서 사회생태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환경지배는 인간의 인간지배에서 발원한다.>는 논리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지배의 실체가 <경제적 지배> 논리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 경제와 외연과 내포

의 관계에서 만나고 있다. 이는 곧 지속가능성이 없는 지속가능 경제, 혹은 지속가능 경제가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아닌 지속가능경제교육에서 그 실체가 명확해질 수 있으며, <지속가능경제교육>의 토대위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경제와 환경이라는 불가피한 대립적 성격을 교육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 순서가 환경교육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이교자 한다.

둘째, 이와 같은 순차적 개념 정립에 따른다면 ESD 교육 내용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DESD에서 제시하고 있는 ESD의 내용과 주제들은 크게 사회/경제/환경 세 분야로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적 순차를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인류 사회의 현안과 문명과 환경문제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DESD에서도 이미 선언하고 있듯이 ESD와 환경교육은 그 내용면에서 같을 수 없으며 오히려 ESD를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ESD와 환경교육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바, 비록 임의적일 지라도 이 논문에서 이를 위한 구분을 시도해 보교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적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ESSD가 그동안 경제 선진국의 논리대로 진행되어 실천적이지 못했던 것임을 지적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는 ESD 10년만큼은 그것이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정치·경제적 요인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여과 혹은 구별되어야 하고, 경제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선(先) 경제 형평 후(後) 환경 개선>의 논리보다는 환경 선진국의 자생적인 생태 논리에 따르는 형평과 호혜의 논리로 주도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적 힘에 의해 관리, 보급, 전파되는 것이

1) DESD에서 구별하고 있는 ESD의 세 가지 영역은 사회-경제-환경이지만, 지구 문명적 현실은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삶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아니라 자생적으로 길러져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sup>2)</sup>. 둘째는 그 동안의 환경교육적 기초와 ESD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영역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대안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기존의 ESSD에서 경제 선진국에 의해서 주도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것이 교육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II. 지속가능성 교육

ESD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근본 이유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ESD에 대한 실천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 자체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ESD와 환경교육 관련 논의들의 대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은 지극히 경제 선진국 중심의 자국적(自國的) 개념으로 국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선진국의 경우, 시장 경제에 의한 환경 자원의 관리가 실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를 토대로 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생태 자원의 수급 정책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중심 환경 관리 정책을 세계화 전략으로 포장함으로써 향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관리 정책이 선진국 환경 문제의 긍정적 해결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ESD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과 이를 위해서 선진국 중심 경제 논리가 후진국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UN-DESD 2005-2014 :8쪽), 그렇게 되었을 때 발생

하는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환경 선진국(저경제 성장 국가)에 의한 자생적 개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기 보다는 경제선진국에서 주도하여 환경 선진국으로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SD에서 환경교육이 기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성 교육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 개념인식의 한계 극복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의 <발전>은 단선적 진보(Linear Progress)라는 의미의 전제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 ESSD가 처음 우리말로 번역될 당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소개되었던 것에서도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sup>3)</sup> ESSD와 관련된 거의 모든 유엔기구의 선언에서도 후진국의 빈곤에 대한 개선이 없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후진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들의 경제 발전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초기 환경 개선이 효과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경제 발전이 선진국이 주도하는 대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보장하거나 생태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French, 1999). 이에 대한 결정적 논거가 리우회담 이후로 채택되었던 많은 지탱 가능성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 선진국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발전이 사실상 단선적인 진보가 되지 않으면 이 지표들이 합당한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데일리와 콥 등에 의한 ISEW 모형은 단순히

2) 이 논문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적 선진국>과 <경제적 후진국>을 말하지만,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경제적 후진국>은 <환경적 선진국>으로, <경제적 선진국>은 <환경적 후진국>으로 표현되었음을 밝힌다.

3)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관련 학자들이 중심으로 왜 <Development>를 개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진정하게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은 생태와 조화되는 것이기에 <Development>의 개념을 일컬어 반드시 <개발>이라는 표현에만 연연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 곧 발전이라는 반성 차원에서 <개발이 발전으로> 바뀌어 사용되어 왔다.

경제 성장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GNP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 복지 지표 모형으로서 지탱 가능성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의한 경제 복지의 확보가 그 주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Daly & Cobb,1989).

이와 같이 발전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는 <경제-생태의 균형적 발전 상태>로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실행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ESD는 이러한 현실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 사회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 공유가 어려운 정치 경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 부>를 통한 환경관리와 그 형평성의 한계**

경제와 환경에 대한 갈등 관계에서 경제 발달에 대한 기대가 환경 보전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앞서는 현실 추세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필요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기는 하되 그것이 경제가 발달된 상태에서 보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의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달되면서 환경도 잘 보전되기(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곧 경제체제를 통한 환경 관리가 잘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 관리는 환경 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통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체제 자체는 공공재인 환경 자원의 관리와 통제에 이미 시장실패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경제 체제에 의해서 관리 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제적 부>가 가지는 역할 때문이다. 즉 경제 체제에 의한 환경 관리의 실패는 <경제적 부>에 의해서 보상되고 있으며, 이는 돈이 없으면 환경관리도 불가능하고,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시장 경제 체제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와 생태의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경제적 부를 통하여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은 균형이 전제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표적 논거로서 M. Kennedy가 지적을 들 수 있다. 그녀는 경제적 부를 표상하는 화폐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오류로써 일방적인 암세포적 부의 증가(Exponential One Type Growth)만이 지구 및 환경자원의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M. Kennedy;1995). 그것은 환경을 경제적 복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돈으로 이를 사들이는 것과 같으며, 동시에 경제적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만이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한다.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번영된 나라가 환경도 잘 관리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에서 실제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엄청난 돈으로 오염권을 사 들이고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을 후진국에 팔고 있다. 실제 가스배출이 가장 심한 후진국의 경우는 오염권이거나 기술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부가 없기 때문에 오염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리주의 환경교육**

경제 선진국에서의 환경교육 대부분은 사실상 <환경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고, 국내의 환경교육 학술지에 회자되었던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의 양성>이란 환경관리를 위한 제반 정치 사회적 노력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김태경, 2005). DESD에서 말하는 환경교육도 이러한 접근을 지향한다. 이는 경제 체제에 의해서 환경이 관리된다는 전제만 확보된다면, 실제로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19세기 이후 교육학이 지향해 온 큰 줄기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인력 양성>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경제적 부에 의한 환경 관리>와 <경제적 체제에 의한 환경 관리>를 지향하는 환경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관리 방향에 부합하는 환경교육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DESD에서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Bowers, 2004). 경제적 부에 의한 환경관리는 더욱 기민해진 관리 기법만 있을 뿐이지 교육은 존재

할 수 없다.

## 2. 지속가능성의 요건<sup>4)</sup>

### 가. 형평성과 선후진국 경제의 공진화

환경 문제에 있어 인류와 자연의 공진화가 근본적인 해결의 화두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이것은 이를 수 없는 인류의 숙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적 부가 우월한 선진국을 인류로 대치하고, 생태적 부가 우월한 후진국을 자연으로 대치한다면 선후진국의 생태적 형평성의 문제는 곧 인류와 자연의 공진화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Halperin, 1988; 전경수, 1998; Luhmann, 2002). 인류와 자연의 공진화가 이를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듯이 선후진국의 생태적 형평성도 그런 속성을 가졌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후진국 경제 체제의 (생태적) 공진화 가능성이 없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울러서 진화의 문제는 경제적 진보로 해결될 수 없다(Hinterberger, 1994). 경제적 발전을 통한 후진국의 빈곤 탈피가 그들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선은 선진국의 환경관리방안에 순응해야 하는 또 다른 경제적 족쇄가 마련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나. 발전(개발)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개선

경제체계에 의한 환경 관리의 실패는 환경 자원의 가치가 부(富)로 환산되는 과정을 낳았고, 선진국의 경제는 이미 생태적 가치들을 부로 환산해 기계적인 조정을 시작하였다<sup>5)</sup>. 지구 자체의 생태적 수용 능력도 기계적인 계산으로 수치화되면서 그 적확성 여부를 떠나 그 수치는 선진국의 계산치로 남아, 지구 환경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적실성의 증거로 확보되고 있다(Kirkpatrick, 1997).

전통 경제학에서 환경 자원에 대한 주요 관점은 자원의 용도별 할당의 문제였지 지구의 수용

규모와 이에 맞는 경제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경제학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환경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총체적인 지구 환경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과 같다. 대표적인 예로 오염원 인자 부담을 통한 경제적 유인 효과에 의해서 환경 관리가 확실히 될 수만 있다면 총량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과 같다(이정전, 1996). 그러한 환경자원의 통제와 조정의 연속선상에 선후진국의 형평성 문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형평성은 여전히 경제적 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조정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ESD에서 말하는 경제 후진국 환경의 개선의 선결 요인으로 순기능적 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이라면 이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첫째, 계산된 지구 수용 용량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정> 차원에서 경제적 의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수용 용량> 자체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의 공유를 위한 과제로 중요하다. 둘째, 자연 자원에 대한 계산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연을 인공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성은 계산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존적 문화 인식

DESD에 의하면 ESD를 통한 실천 사항들의 저변을 형성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강조이다. 근대 산업사회 형성 과정과 경제 발전의 결과물로 형성된 문화가 아닌, 생태와 지역문화의 이해는 그것의 실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환경교육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Bowers, 2004; Todvine, 2003). DESD에서는 ESD의 내용을 사회-경제-환경의 세가지 영역으로 했다면 이 세 가지 분야를 아울러 엮어 낼 수 있는 것이 문화로 보았으며, 앞에서 언급

4) 이하 소제목의 일부 순서와 내용은 같은 취지의 정희성의 논문에서 인용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필자가 철저히 인용문헌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5) 코스탄자(Costanza, 1997) 등은 지구환경의 서비스를 17가지의 생태 서비스로 나누어 추정한 바 있으며, 금액으로 하면 최소 <16조 달러/year>에서 최대 54조 달러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로 연간 약 33조 달러의 서비스로 평가된다.

된 정치·경제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문화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문화의 이해를 위한 실존적 정신 공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DESD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속 발전의 세 가지 영역 중 사회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내용은 대부분 거대 이익사회 중심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실존적 문화 이해의 정신 기반은 더욱 농후하게 필요하다. 생태(지역)문화의 실존적 인식이란 그것들이 경제 가치에 매몰되어 원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자생(自生)문화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소중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 문화, 생활 경제 속에서 숨쉬고 있는 생태적 자급성(self-sufficiency)에 관련된 생활 문화 등이 중요한 환경 교육 자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DESD에서 거론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 간문화적 문화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와 1차 생산지역의 변이(Rural Transformation)등은 지역 사회에 대한 생태 공동체적 문화 인식의 저변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을 원용한다면 오늘날 환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公共) 문제는 무인승차 심리가 보여주듯이 사실상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일대다(一對多)의 관계 속에서 의사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대면(面對面)의 사회적 공동체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박효중, 1992). 면대면의 사회적 공동체성은 곧 그 사회의 실존적 정신 공간이 확보됨을 말한다(김태경, 1999).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의미하는 바대로, 경제적 목적으로 분절되고 포장된 시간과 경제적 존재자로 전락된 환경 가치들은 이미 실존적일 수 없다(Zimmerman, 2003). 더구나 DESD에서 경제적 후진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적 평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변형된 환경 가치들을 후진국에 적극 보급 전파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아서 환경 가치들의 실존성을 더욱 상실하게 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는 정치·경제적으로 재단된 지구가 아니고 지구 그 자체일 뿐이고, 후진국의 환경은 경제적 보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Toadvine, 2003).

#### 라. 환경(생태) 정의로써 지구 환경 자원 분배 정의

경제적 차원에서 지구 환경 자원의 지속적 관리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 논제 중 하나가 정상 상태(Steady-State)경제이다. 환경 자원의 한계로 항구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면 지속가능성은 곧 정상 상태의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정상 상태는 경제 후진국의 환경적 침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동안 ESSD가 보여준 정치 경제적 궤적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DESD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의 공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환경 자원에 대한 지구 차원의 분배정의이다(Daly, 1977; Singh, 1976).

#### 마. <경제적 부>에 의존된 ESD에서의 탈피

지금까지 <경제적 부>에서 배태되는 여러 부정적 한계점으로 볼 때 ESD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와 무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경제적 부>에 대한 의존 없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체적 모순을 가진다. 예를 들어 ESD의 중심 개념 축을 형성하는 형평성(Equity)의 문제를 비롯하여 양성 평등, 빈곤 타파, 재난 방지, 에이즈 퇴치 및 생활 위생 개선, 지역 문화 보호... 정치 민주화.., 거의 모든 것들이 경제적 부의 확보없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 결국 선진국의 시각에서만 실현 가능한 그들만의 또 다른 경제적 환경관리 어젠다

6) ESD에서 언급하는 문화는 기성 문화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것이 실존적인 것임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실존적 문화 이해를 위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Agenda)에 해당할 뿐이다.

### 3. 자유무역의 세계화전략과 지속가능성

ESD에서 상정하고 있는 형평성을 논함에 있어 선진국 중심의 자유 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화 전략은 중요한 변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 논리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있다. 긍정적인 논점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논점인데 자유 무역의 확대는 무역 당사국들의 소득 증대로 환경 투자 여력을 주며, 아울러 환경 친화적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적 이용의 기회가 증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진국 등의 무역 당사국 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논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논리대로 하자면 자유 무역을 통한 세계화 전략은 선진국 중심의 지구 환경 관리의 세계화에 다름아니다. 즉 자유 무역이 선·후진 국가간 환경 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선진국의 경제적 부의 일부로 후진국의 환경이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ESD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주류 경제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자의 관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적해 온 선진국 중심의 후진국 환경 관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의 맥락과도 상통한다. 이럴 경우 후진국은 자연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지역 생태 문화가 붕괴되어 정신적 혼란이 가중되고 선진국의 오염 산업 이전으로 실제 생활 오염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정희성, 2002).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지구적 차원의 자유 무역과 세계화의 진행 결과에 대한 교육적 자료가 지금까지는 구

체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될 경우, 오로지 자유 무역의 현실적 이점을 들어서 선진국 중심으로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발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이 가져온 추세도 그렇고 후진국은 현실적인 경제적 부의 확대 때문에 이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환경자원이 희생되었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 주도되는 자유 무역에서 후진국의 <생태적 부>가 자유 무역의 <경제적 부>로 정당하게 대체되는지의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런 관점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지속발전 교육은 지속가능성 교육을 선행적으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

### III. 지속가능경제 교육

위에서 살펴 본대로 논의를 정리하자면 ESD의 교육 내용은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양자의 개념적 구별은 <표 1>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ESD의 내용에는 이 상충적인 양자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형평성을 통한 <선진국의 경제적 환경 관리 방법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배(boat)에 비유한다면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은 전혀 성격이 다른 <실존적 지속가능성의 지역 문화 체계>가 실려 있는 채로 세계화의 물살을 가르고 있는 것과 같기에 이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정치 경제적 요인의 포함 여부>이다. ESSD가 그렇듯이 지속가능 발전의 발전(De-

<표 1> 지속가능성교육과 지속발전교육의 내용적 흐름 비교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실존적 문화 중심	통제 가능한 경제 형평성 중심
지역 생태와 문화 중심	<경제적 부> 중심
자유 무역 세계화에 반대	자유무역 세계화에 순응



velopment)는 태생적으로 정치·경제적 요인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속가능성이란 이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 자유로워진 지속가능성 부분을 환경교육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다시 요약한다면 <실존적 지속가능성의 지역 문화 체계>라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는 <선진국의 경제적 환경 관리 방법>이 아니라 <지속가능 경제>라는 배이다. 즉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시각을 환경관리주의 경제에서 지속가능 경제로 바꾸어 본다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

### 1. <생태경제>의 실체로서의 지속가능경제

단선적 발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제가 된다면 다른 논법이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의미적으로 지속가능경제는 생태 경제를 의미하게 되고, 그 운용의 중심축이 경제적 부를 확보한 선진국에서 생태적 부를 확보한 후진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면서 그 추동력이 경제적 부가되었던 암울함으로부터 지속가능경제를 추구하면서 그 경제 자체를 실존적이면서 동시에 현상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그곳이 확보되기 쉬운 곳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ESSD 차원에서 그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속가능성이란 관리될 수 있거나 계획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맞도록 창조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태적 자족성에 의해 길러져야 하는 원래 성질을 되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경제를 가지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것이 되도록 선·후진국의 우호적인 상호 호혜 관계로 지속가능경제를 창출해가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은 선진국의 경제 방식대로 그 상태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그동안

의 환경 관리 방식을 쓰면 된다. 다만 그런 방식이 제3국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거나,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환경 파괴를 오히려 부채질 하지 말고, 오히려 제 3국의 생태적 우수성 자체가 경제적 부를 능가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환경교육이 담당해야 할 지속가능교육이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공헌해야 한다.

### 2. 지역중심의 지속가능경제 교육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경제는 내용적으로는 생태 경제를 지향하고, 공간적으로는 지역중심이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중심의 지속가능 경제교육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적 환경관>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실존적 환경관의 상대적 개념을 도입하자면 <존재자적 환경관>이라 할 수 있다. 존재자적 환경관은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좋은 환경>이 서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환경관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의 깨끗함은 누리되 경제적 부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서열을 차지하는 존재자로서의 좋은 환경이다. 존재자로 변한 좋은 환경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로서 상품화되고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의 대상이 되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파되어 그들의 환경 관리 목표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환경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견지할 수 없고, 환경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일상성도 큰 의미가 없다. 나와 환경은 같이 진화되어야 하는 한 몸이 아니라 타인이며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인류환경이 파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은 이미 생태-경제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수없이 주장에서 밝혀져 왔으며, 최근 환경교육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은 바로 지역 문화를 존재자적 경제 가치로 매도하지 말고 실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존적 환경관이 확립되지 않고는

생태 경제의 기본이 마련될 수 없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환경관의 확립을 통하여 지역 생태 문화가 상품화되지 않고, 호혜 중심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것이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자리매김해 가야 될 것이다.

#### IV. 교육내용에 대한 조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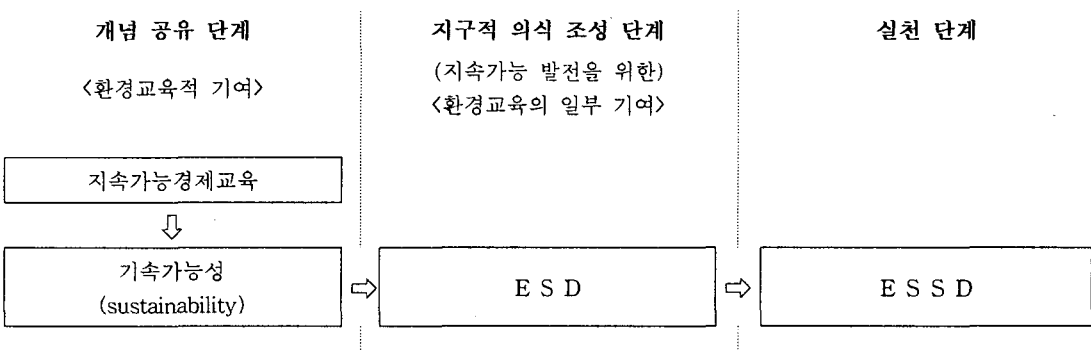
유네스코에서 내세우고 있는 ESD의 많은 부분이 <지역중심의 지속가능경제체제>를 위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이나 양성 평등, 생활 위생의 문제도 모두 지역 문화와 의식에 따라 다르다. 지역 문화나 그들의 전통 의식들은 모두 그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임은 수많은 인류학적 연구와 인간 생태학, 민속지(Ethnography) 연구에서 너무도 많이 밝혀진 상식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속가능성이란 지역경제체제를 잘 보전시켜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다. <Development>가 단선적 진보로서의 발전이 아니라 <생태적 조화를 통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ESD에서 표방하는 모든 내용들은 지역 문화와 자급적 지역경제체제(Self-Supporting System)에 순응하는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은 한마디로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은 선행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그림 1).

따라서 각 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V. ESD와 환경교육

ESD에서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 기존의 환경교육의 내용과 많이 중첩되거나 혹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논자에 따라서는 환경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동일시 할 수 없고 환경교육의 한 부분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며, 이 두 개는 서로 공유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아닌 환경교육의 부분도 있고, 환경교육이 아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7)</sup>. 한편 또 다른 견해로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교육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양성 평등, 빈곤 타파, 정치적 민주주의의 구현 등은 환경교육의 영역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그림 1> 지속가능성 교육과 ESD 교육 체계와 흐름순서

7) 이런 차원에서 2006년 10월 12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교원대학교 이 두곤 교수의 질의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교수의 질문 요지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교육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으며, 이는 필자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하여 이두곤 교수의 질문요지를 그대로 요약함을 밝힌다.

〈표 2〉 ESD와 환경교육의 내용 영역 구분<sup>8)</sup>

영역 구분	중간 영역 구분	세부 교육 내용 (사례)
교육영역 (지속가능경제교육 => 지속가능성 교육)	환경교육 영역	Peace and human security. Cultural diversity & intercultural understanding. Health. Governance. Sustainable urbanization. Corporate responsibility & accountability.
	ESD 영역	Poverty reduction. Disaster prevention & mitigation. Natural resource. Rural transformation.
비교육영역 (실천정책영역)	ESSD 실천 영역	Human right. Gender equality. HIV/AIDS. Market economy.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영역 구분의 논란이 생기는 것은 크게는 ESD의 내용이 기존 환경교육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이며, 작게는 ESD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으로의 전이 필요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EE와 ESD의 개념적 영역 구분의 필요성을 달리 표현한다면 기존의 환경교육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림 1〉과 같이 개념구분을 할 경우, ESD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으로 대체하면 기존의 환경교육적 내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녹아 들 수 있으며 결국 내용영역의 문제는 선후 문제의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을 통한 개념 인식을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환경교육이며, 이런 영역이 환경교육으로 묶여져야 하고 나머지는 환경교육으로 수용되기에는 정치경제적 요인의 변수가 조정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환경교육에서는 양성 평등이나 빈곤의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요인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될 때는 앞에서

지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그것들은 또 다른 정치·경제학적 자리매김을 요구받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실제로 경제적 부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 실천적 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은 될지언정 환경교육의 영역으로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ES)>과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이 실현되는 사회는 곧 지속가능한 경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논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환경교육이 추구해 온 전통적 교육가치는 외형적 환경 오염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이라는 외재적 가치에 중심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은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내/외재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환경교육이 제대로 된 지속가능성 교육이라 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조금 더 연장한다면 〈그림 1〉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영역>과 <ESD 교육

8) 이 내용영역의 구분은 DESD에서 설정된 내용을 이 논문에서 지향하는 필자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것임을 밝힌다.

영역)은 각각 <지속발전 경제교육>의 내/외재적 영역으로도 통합될 수 있다. 즉 내재적 영역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영역(구체적으로는 환경교육 영역), 외재적 영역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영역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었을 때 지속발전경제교육은 사실상 환경교육과 내용적인 부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발전경제교육은 생태경제교육인 동시에 환경교육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VI. 결 론

이 논문의 핵심은 ESD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의 실체를 공유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는 것이고, 그 지속가능성의 실체는 경제문제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ESD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역할은 사실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ESD의 순서를 이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이에 따른 순차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속가능 발전(ESSD)과 관련된 환경교육적 논의가 성과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앞에서 제기한 지속가능성과 정치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발전 그 자체에서 지속가능성 영역을 분리하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은 선진국의 <경제적 부에 의한 환경관리> 방식으로 통제되어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생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발전이 되기 이전에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근본물음이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류 차원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선결되었을 때 비로소 DESD에서 말하는 <경제적 형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 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교육>을 그 기반으로 시작해야 하고 이것이 환경교육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ESD도 이 두 가지 선후문제에 따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확보되어야 할 부분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태경 (2005). “환경관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환경교육*, 18(3), 59-74.
- 김태경 (1999). *학육과 연찬에 의한 대안적 환경교육방안*, 서울대 박사논문.
- 니콜라스 루만 (1990).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남복 역, 2002), 87-104, 서울: 백의출판사.
- 박덕제 (1986). *경제학과 환경위기(Economics and The Crisis of Ecology)*, (박덕제 번역본, 1976), 41-100, 서울: 비봉출판사.
- 박효중 (1994).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II)*, 42-147, 서울: 인간사랑.
- 오용선 (1994). *지탱가능성경제복지지표를 이용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전 (1996).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가능한가?”, *경기과학*, 102, 89-100.
- 전경수 (1994). *문화의 이해*, 82-142, 서울: 일지사.
- 정희성 (200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권태준교수 정년퇴임기념 제 91회 이론과 실천 세미나 발표논문.
- French, H. (1999).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 하는가?* (주요섭 역, 2001), 119-169, 서울: 도요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방안, 국제세미나 발표논문집*.
- Bowers, Chet. A. (2005) *Rethinking Freire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Crisis*, Ch 1.
- Daly, Herman E. (1977) *Steady-State Economics -The Economics of Biophysical Equilibrium and Moral Growth*, 41-56.
- Daly, Herman E. & Cobb, John B. (1989) *For The common good :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le Future*. 80-83, Beacon

- Press, 1989.
- Faber Stephen, Local and Global Incentives for Sustainability : Failures in Economic Systems, *Ecological Economics*, Ch. 22.
- Halperin, Rhoda H. (1988) *Economics across Cultures*, 25-86, Macmillan P.
- Kennedy, M. (1995). *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 15-32, SEVA.
- Kirkpatrick, C. & Lee, Norman (1997).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Developing World*, Edward Elgar.
- Toadvine, T. & Brown, Charles S(ed) (2003). *Eco-Phenomenology -Back to the Earth Itself*, Albany.
- Pearce, D. W. & Atkinson, G. D.(1993), Capital theory and the Measur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An Indicator of Weak Sustainability, *Ecological Economics* 8, 103-108.
- UNSCO(2005), *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Zimmerman, Michael E. (2003), Heidegger's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Environmentalism, *Eco-Phenomenology* Ch. 5.